

해양공간 인식과 확장의 관점에서 본 한국 해양전략의 발전 방향

정 광 호*

-
- I. 서론 : 안보위협 변화
 - II. 해양공간의 인식과 핵심해양공간
 - III. 해양공간 확장에 따른 한국 해양전략 발전 방안
 - IV. 결 론
-

* 해군소령, 군사학 박사, 現 해본 기획관리참모부 무기정책과.

I. 서론 : 안보위협의 변화

위협이란 ‘상대방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말한다. 위협은 범죄자, 적국, 초국가적 위협 등 사회적 행위주체(인간 및 인간 집단)의 의도적 행위가 손상의 원천인 경우에 발생된다. 즉, 위협은 기술적, 공학적, 또는 자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군사적·사회적·심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된다. 따라서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주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안보(security)라고 한다.

위협을 가하는 측은 위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위협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위협은 능력과 의도의 결합의 산물이고, 여기서 능력은 잠재적 위협국가의 군사력으로 말할 수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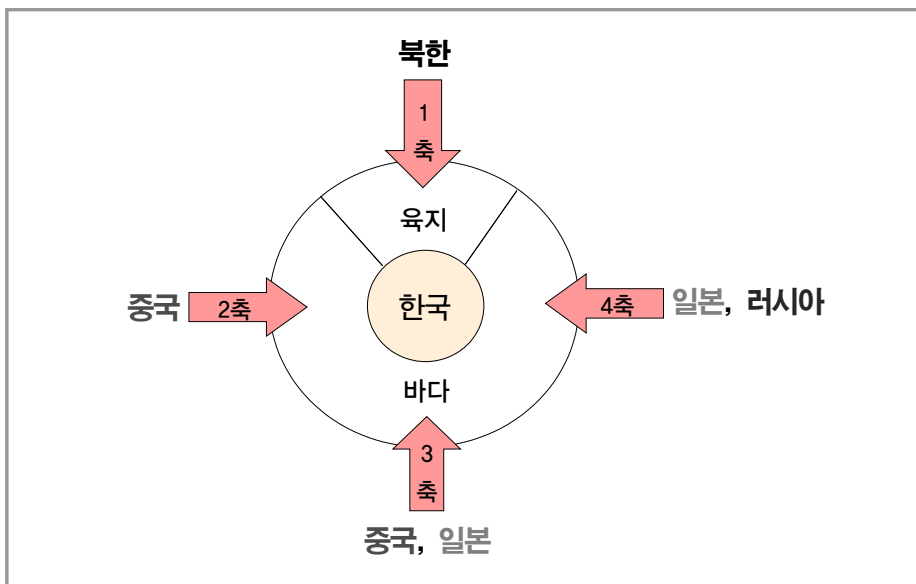
한편 특정 위협이 언제 국가안보의 문제가 되는가라는 것은 그 위협이 작동하는 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강도는 7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① 위협의 구체성(구체적 위협, 포괄적 위협) 여부이다. 한국의 경우, 북한 핵 위협과 침략 가능성,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 등은 구체적 위협이고, 공산주의 이념의 위협이나 테러리즘은 포괄적인 위협이다. ② 위협의 공간적 근접성 여부이다. 국가 간 공간적 이격성에 의해 위협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느껴진다. 즉 공간적 접근성이 가까울수록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멀수록 낮아진다. ③ 위협의 시간적 근접성 여부이다. 위협이 즉각적인 것인가? 또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가? 북한의 남침 위협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보다는 가까이 있다.

④ 위협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개연성의 강도이다. 위협이 실제로 현실화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위협은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현실화 될 수도

1) 적대국에 대한 위협을 평가할 때는 적대국의 능력과 의도 모두 고려해야 된다. 만일 적대국의 군사력은 무시한 채 그 의도만을 호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행동한다면 심각한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38년 ‘뮌헨협정’이다. 1938년 9월 28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이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독일 뮌헨에서 4자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영국 수상 챔벌린은 체코의 영토와 유럽의 평화를 맞바꾸려고 했다. 이 회담에서 체코 영토의 1/3을 독일에 주는 대신 히틀러로부터는 “앞으로 모든 국제적 분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협정이 뮌헨협정이다. 그러나 합의 6개월도 되지않아 히틀러는 체코의 나머지 국토마저 무력으로 병합하고 같은해 9월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으켰다.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서울: 法文社, 2010), pp.10-12.

있다. 현실화 된다면 그 개연성은 높은 것이다. ⑤ 이익 침해의 심각성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여하는 위협이 국가의 생존적 이익과 사활적 이익을 어느 정도 침해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상대방 국가가 군사력으로 이런 이익을 침해할 경우, 국가는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⑥ 역사적 경험 여부이다. 동서독은 전쟁의 경험이 없지만 한국은 일본, 중국, 북한으로부터 침략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⑦ 국가 간 우호성 여부(의도)이다. 우호성 여부에 따라 상대 국가를 위협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²⁾

<그림 1> 변화된 안보환경 하(下)에서의 위협 인식 변화



위에서 언급한 위협의 강도에 대한 분류 기준으로 한국의 위협을 분석해보면, 지금까지 한국의 주 위협은 북한이었다. 북한의 위협에 근거한 전략을 수립해서, 전력건설이 이루어졌고 국방비의 대부분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렇다보니 주변국(중·일·러)이 위에서 언급한 위협의 7가지 강도를 다 충족하여, 막강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능력과 의도를 가진 실질적인 위협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변국을 위협으로 간주한 전략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1), pp.164-170.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이같은 한국 안보환경의 구조적 메커니즘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위 <그림 1>에서 보듯이 변화된 안보환경 하에서의 한국은 북한에만 집중했던 1축의 위협뿐만 아니라 2축(중국), 3축(중국, 일본), 4축(일본, 러시아)의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복잡한 딜레마에 놓여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1~4축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한 1축(북한)의 위협에만 대응하고 있었다. 즉 바다로부터의 위협에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던 것이다. 1축의 위협이 육지로부터 오는 위협이 주였다면, 2,3,4축의 위협은 바다로부터 오는 위협이다. 전략은 위협이 있어야 수립이 가능하고 위협이 변했다면 전략도 변해야 된다. 따라서 한국의 변화된 안보환경은 위협을 고려한 한국 해양전략의 변화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의 국가방위 전략은 ‘전군전사(全軍戰死)’이다.³⁾ ① 적군이 쳐들어오면 일단 스키부대가 국경으로 출동하여 전원 전사한다. ② 적군이 국경선을 넘으면 이번에는 보트 부대가 출동하여 전원 전사한다. ③ 적군이 내륙으로 진입하면 본격적으로 핀란드 군 본 병력이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다. ④ 적군이 수도인 헬싱키 앞까지 이르면 수도 방위군단이 출동하여 전원 전사한다. ⑤ 적군이 헬싱키를 점령하고 나면 이렇게까지 해서 이 도시를 차지할 필요가 있었을까 회의감이 들게 한다. 이같은 국가방위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감히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이 전략은 강자에 대응해 약자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억제전략이다.

고려말 14세기 공민왕 시절 왜구의 공격이 빈번하자, 젊은 학사 이색은 공민왕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왜구는 바다에서 움직이며 기회를 보는데, 육지만 지키는 방어전술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왜구를 소탕하려면 해군을 육성해 바다로 나가 왜구를 찾아서 소탕해야 한다.” 공민왕은 이 전략을 채택하여 왜구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바다에서 지킨다는 의미로 이 전략을 ‘해방론(海防論)’이라 불렀다.

3) 1939년 핀란드는 소련과 105일 동안 전쟁을 치렀다. 겨울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에서 핀란드 인구는 300만명, 침공해 온 소련 병력은 100만 명이였다. 전차나 항공기의 숫자는 전차 32대 vs 6,500대, 항공기 114대 vs 4,000대였다. 이 전쟁에서 소련의 전술은 단순했다. “전진해서 점령한다. 단 너무 과다하게 전진해서 국경 넘어 스웨덴까지 들어가는 실수는 하지 말도록”이었다. 하지만 핀란드는 이 전쟁에서 석달 보름을 버텼다. 소련 전차 3,500대를 격파했고, 항공기 500대를 격추시켰다. 결국 소련은 핀란드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포기하고, 약간의 영토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핀란드의 ‘전군전사(全軍戰死)’, 고려의 ‘해방론(海防論)’, 이 두개의 전략 개념이 현재 한국이 변화된 안보환경에서 추구해야 될 전략개념이 무엇인지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한국은 역사상 가장 부국강병한 시기에 있고, 세계 10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북아에서는 북한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가 불안한 이유는 나를 위협하는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나의 능력 부족, 즉 취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협을 줄이거나, 나의 취약성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해군력을 지속해서 증강시키고 있다.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줄여야 한다. 강자에 대한 약자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핀란드의 ‘전군전사(全軍戰死)’와 같은 전략을 한국이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고려의 ‘해방론(海防論)’처럼 바다로부터 오는 위협을 바다에서 한국이 거부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변화된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해양전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한국의 변화된 안보환경이 바다로부터 오는 위협 강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강자에 대한 약자의 전략 즉, 한국이 주변국에 대해 추구할 수 있는 해양전략이 무엇인지를 해양공간이란 해양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해양공간의 인식과 핵심해양공간

1. 해양공간 인식에 대한 문제

이제 우리는 바다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해 걱정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바다로부터 오는 위협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방어할 것인가? 한국의 해양전략 수립의 첫 질문일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바다로부터 오는 적을 어느 선까지 방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문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공간은 태초부터 존재해 온 기본 값으로서 3차원으로 비어 있다. 우

리가 일상 속에서 생활하는 거리나 광장의 공간이나 우주의 비어 있는 공간은 똑같은 공간이다. 우리가 흐린 날 하늘을 바라보면 검은색으로 깊이감이 없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우주왕복선에서 찍은 사진 속의 우주 공간도 무한한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잘 인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거기에 별과 달, 그리고 동해바다 수평선 너머로 지나가는 상선이나 어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공간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를 미루어 보아 공간은 인식 불가능하지만 그 공간에 물질이 생성되고 태양빛이 그 물질을 때리게 되고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공간은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류가 건축을 하기 전에도 지구상에는 땅, 나무, 하늘의 구름 같은 물질에 의지해서 공간이 구획된다. 그 빈 땅 위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거리라는 새로운 공간이 구축되고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 거리는 주변에 들어선 건물의 높이와 거리의 폭에 의해서 각기 다른 형태의 보이드(void: 현관, 계단 등 주변에 동선이 집중된 공간과 대규모 홀, 식당 등 내무 공간 구성에서 열려 있는 빈 공간) 공간을 갖게 된다. 우리는 정지된 물리량인 도로와 건물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비어 있는 보이드 공간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사람과 자동차 같은 움직이는 객체가 들어가게 되면서 공간은 비로소 쓰임새를 가지며 완성이 된다. 이처럼 도로와 건물 같은 물리적인 조건 이외에 거리에서 움직이는 개체도 거리의 성격을 규정하는 한 요인이 된다. 움직이는 개체들이 거리라는 공간에 에너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개체의 속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물체의 속도는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E=\frac{1}{2}mv^2$)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⁴⁾

이처럼 공간은 움직이는 개체가 공간에 쏟아 붓는 운동에너지에 의해서 크게 변한다. 운동에너지($E=\frac{1}{2}mv^2$)는 질량에 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의 절반이다. 이 물리학 법칙을 보면 속도는 에너지의 제곱의 절반으로 영향을 미친다. 같은 질량의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그 속도가 시속 1킬로미터에서 시속 4킬로미터로

4) 뉴욕 록펠러 센터의 스크린가든(지하나 지하로 통하는 공간에 꾸민 정원)은 여름에는 정적인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겨울에는 움직임이 많은 스케이트장으로 운영이 된다. 같은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그 공간이 의자에 앉아 있는 레스토랑 손님으로 채워졌을 때와 스케이트 타는 사람으로 채워졌을 때는 다르다. 공간은 어떤 행위자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느낌과 성격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변화의 요소는 모두 움직이는 것들이다. 유현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서울: 을유문화사, 2015), p.36.

4배가 되면 운동에너지는 8배가 된다. 속도가 시속 8킬로미터가 되면 운동에너지는 32배가 된다. 따라서 같은 거리에 같은 수의 자동차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그 거리의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의 절반 값을 모두 모은 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거리라는 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여기까지 우리 공간이라고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한 공간에 운동에너지를 보낼 수 있을 때만이 실질적인 우리의 공간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군사적 관점으로 돌아오면, 바다로부터 오는 위협을 바다에서 거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부를 위한 공간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도련선(島鏈線) 개념이다. 우리가 방어하고 거부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까지 보낼 수 있는 운동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이 운동에너지는 수상·수중·항공 플랫폼, 유도탄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해양공간 인식을 위한 운동에너지 확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항공기의 KADIZ 진입 사례이다. 중국 군용기 1대가 2018년 8월 29일 동해와 남해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을 하였다. 2018년(8월 현재)만으로도 5번째 진입사례였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사례는 2016년 50여건, 2017년에는 70여건으로 늘어났다. 동해까지 진입한 장거리 무단 진입은 2017년 두 차례에 이어 2018년 5차례나 반복되고 있다. 중국의 KADIZ 무단 진입은 중국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201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설정한 해양공간에 중국은 지속적으로 항공기를 통해 운동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CADIZ를 설정만 해놓고 운동에너지를 보내지 않는다면 주변국이 느끼는 CADIZ란 공간에 대한 인식은 미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운동에너지의 관점으로 본다면 중국의 KADIZ 진입사례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또한 최근 들어 해양공간에서의 운동에너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9월 13일 일본은 처음으로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잠수함 구로시오와 함께 가가 등 호위함 3척이 동원된 이 훈련은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내 해역에서 실시되었다. 일본이 잠수함 훈련을 이례적으로 공표한 것은 남중국해에서 해상자위대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⁵⁾

공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리고 공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설정 공간에 운동에너지
 지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공
 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간은 점(point)과 선(line)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과 선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2. 해양공간 구성에 대한 문제 : ‘점+선+면’ 전략

공간은 3차원적인 면, 면을 구성하는 선, 선을 구성하는 점이 있어야 된다.
 해양공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점과 선과 면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이 필요하다.
 점을 둘러싼 해양 경쟁의 대표적인 것이 거점 확보를 위한 도서 영유권 분쟁이
 다. 역내의 연안 국가들이 유·무인 도서를 가릴 것 없이 영유권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아낌없이 쏟는 이유는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 대륙붕 사
 건에 대한 판결 이후 확립된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바다
 에서 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에 관한 관
 할권도 행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보장된
 무해통항권, 항행의 자유권 등 역외국가의 권리도 침해될 개연성이 커진다.

중국의 해양전략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의 유·무인도서에 대한 영유권
 강화라는 ‘점’ 전략에서 출발하여 남해구단선, 제1도련선, 제2도련으로 대표되
 는 ‘선’ 전략으로 진화해 왔다. 미국의 해양패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인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Anti Access/Area Denial)’ 전략은 앞으로 공격적인
 ‘면’ 전략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구상하는 유라시아의 대륙과 해
 양을 잇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또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전략
 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⁵⁾

역사적으로 미국의 해양전략은 ‘점·선·면’을 이용한 해양전략이었다. 대
 표적인 전략이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 전략이다. 시바 료타로의 ‘언덕
 위의 구름’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도고 제독이 이끄는 일본 연합함대 작
 전참모였던 요시후루 사네유키가 젊은 장교 시절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이다.
 거기서 사네유키는 미국과 쿠바 전쟁시 미국 해군이 쿠바의 항구를 봉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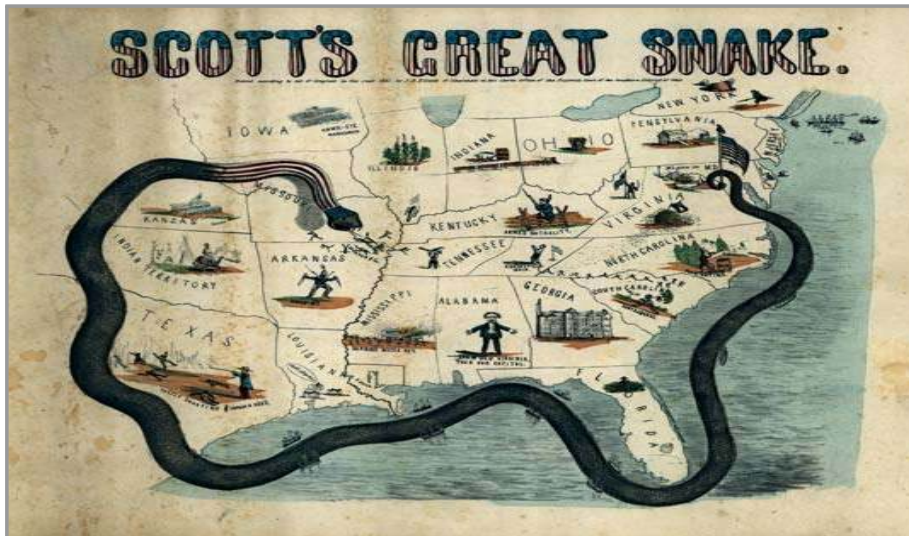
5) “日 잠수함 부대 남중국해서 첫 훈련,” 『서울경제』 (2018. 9. 18).

6) 구민교, “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2016), p.39.

작전을 실시할 때 미국 측의 관전 장교로 참가하게 된다. 미국 해군의 봉쇄 작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사네유키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러일전쟁 당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순항 봉쇄 작전을 실시하여 성공하게 된다. 이 작전은 미국의 해상봉쇄란, ‘선’ 전략의 첫 번째 출발이었다.

1861년 미국 남북 전쟁 시 북군이 남군에 대해 ‘아나콘다 플랜(Anaconda Plan)’인 해상봉쇄 작전을 펼치게 된다.⁷⁾ 북군은 우세한 해군력으로 남부연합의 해안선과 미시시피강을 비롯한 내륙의 주요 수로까지 점령했다. 남부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이 결정적인 작전으로 남부군은 결국 패배하게 된다. 이후 미국은 미·일간 태평양 전쟁 시 미국의 ‘단계적 접근 전략(Step by Step Strategy)’⁸⁾, 1962년 미국의 쿠바봉쇄 등의 해상봉쇄 전략을 통해 전쟁을 승리하게 된다. 또한 21세기 들어서 중국의 해양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점·선·면’ 전략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아나콘다 플랜(Anaconda Plan)



7) Stephen R. Wise, *Lifeline of the Confederacy: Blockade Running during the Civil War* (Columbia: Univ. of South Carolina Press, 1988), p.221.
 8) 단계적 접근 전략은 태평양 섬들 중 전략적 가치가 있는 섬들을 요새화하여 축차적으로 전진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태평양이란 해양공간에 대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1934년 미국의 공식적인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 시 남태평양에 있는 일본 점령 도시를 축차적으로 점령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본 본토를 바다에서부터 봉쇄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정광호,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 전개에 관한 연구: 도전국가의 핵심해양공간 진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96.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제7함대 해양 투사력의 상대적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이래 ‘아시아 회귀’ 또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역내 주요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연합훈련 강화, 호주 다윈에 미 해병대 주둔 결정(2011년), 오키나와 미국기지 재편, 괌 주둔 병력 증강, 그리고 필리핀 내 폐쇄된 미국기지 재사용 공식화(2016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1단계 노력은 새로운 거점 확보 및 기존 거점의 강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미군의 접근이 어려운 아시아의 작전 환경을 이용한 중국의 A2/AD 전략에 맞서 ‘공해전투(Air Sea Battle)’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는 2015년부터 육군 전력을 포함하는 합동성 개념인 ‘공역 접근 및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으로 발전되었다. 냉전 이후 약화된 미국 해양패권의 선 전략을 복구함과 동시에 면 전략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⁹⁾

미국은 2018년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¹⁰⁾로 변경했다. 군사력 재배치 등의 변화는 없지만 인도·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선 전략’의 확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대만과의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남중국해 견제를 위한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전형적인 ‘위위구조(圍魏救趙)’¹¹⁾ 전략이다.

3. 핵심 해양공간(The Crucial Maritime Sphere)

앞에서 저자는 해양공간의 인식은 운동에너지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간이란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구성요소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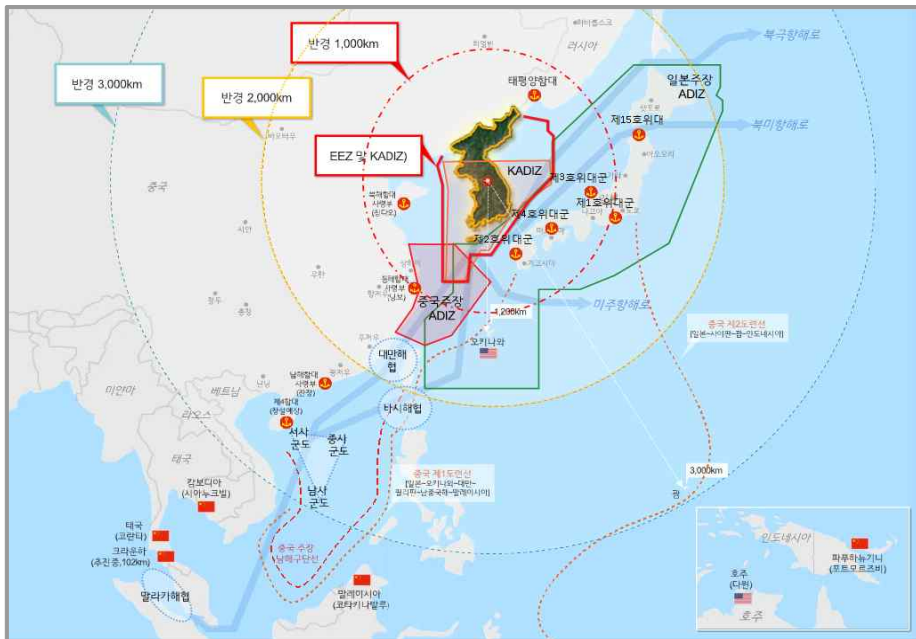
9) 구민교, 전게서, pp.39-40 .
 10) 1947년 1월 창설된 태평양사령부는 지역 통합군으로서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인도 동쪽부터 미 대륙 연안을 제외한 태평양까지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의 주둔군이다. 관할 지역 내 국가는 총 36개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지휘하는 곳도 태평양사령부다. 소속된 미군·군속만해도 37만5,000여명에 이른다. 태평양사령부 이름 앞에 인도라는 말이 붙게 된 것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동북아시아, 호주,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통칭하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인도,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고 해상에서 중국의 확장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방증하는 것이다.
 11) ‘위위구조’ 전략은 전국시대 제나라가 위나라의 침공을 받은 조나라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자, 구원병을 조나라에 직접 보내지 않고 위나라 수도를 포위하는 방식으로 조나라를 구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남중국해엔 한해 3800조원이 흐른다...그래서 사활 건 美·中.” 『서울신문』 (2018. 6. 26).

지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공간에서의 ‘점·선·면’ 전략은 운동 에너지와 연관된 전략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이 운동에너지는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해양 무기체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안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바다로부터의 위협을 거부할 수 있는 ‘핵심 해양공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적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거나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 적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양면전쟁을 강요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공격 또는 방어 시 전진기지 및 완충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핵심공간(Crucial Sphere)’¹²⁾이라 한다. 그렇다면 해양공간에서의 핵심공간을 핵심해양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의 해양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의 핵심해양공간을 설정해야 된다. 이 핵심해양공간은 한국의 해양무기체계, 즉 운동에너지가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림 3〉 한국의 핵심 해양공간(The Crucial Maritime Sphere)



12) 핵심공간은 전략적 요충지(choke point)와는 다르다. 전략적 요충지는 순수한 지리적 개념으로 수에즈 운하나 말라카 해협과 같이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가치를 갖는다. 반면 핵심공간은 지리와 같이 고정적 개념 뿐 아니라 국가간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정치적 상황, 국가관계, 시기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한다. 박창희, “동북아의 지전략적 핵심공간과 근대 일본의 현상 도전,” 『아시아연구』 (2010), pp.60-61.

위의 <그림 3>는 서울을 기준으로 반경 3,000km, 2,000km, 1,000km의 3선 핵심해양공간을 설정하였다. 설정의 기준은 해양공간에 대한 운동에너지가 미치는 영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다. 저자는 3단계의 핵심해양공간을 공격과 방어라는 기본 전략을 통해 구분해보고자 한다.

순수한 방어는 자신을 지킬 수는 있으나 승리를 쟁취할 수는 없다. 방어에만 치중한다면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자는 공격과 방어의 관계에 대해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방어하기 때문이요,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공격하기 때문”¹³⁾이라고 했고, 클라우제비츠도 진정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하려 한다면 적의 공격을 되갚아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의 공격을 기다리는 중에도 총탄은 공세를 취할 수 있듯이, 방어적 형태의 전쟁은 단순히 막기만 하는 방패가 아니라 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장력을 구비한 방패여야 한다는 것이다.¹⁴⁾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공격과 방어는 이론적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3선의 핵심해양공간을 공격과 방어라는 이론적인 전략 즉, 공세적 방어(적극적 방어), 방어적 공세, 적극적 공격으로 디자인 해 보고자 한다.

<표 1> 핵심해양공간의 3선 공·방 전략 디자인

구분	핵심해양공간	공·방 전략
1 선	반경 3,000km	공세적 방어(적극적 방어)
2 선	반경 2,000km	방어적 공세
3 선	반경 1,000km	적극적 공격

‘1 선 전략’ : 반경 3,000km의 핵심해양공간에 대해서는 ‘공세적 방어’ 혹은 ‘적극적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공세적 방어는 전략적 수준에서는 방어이지만, 전술적 수준에서는 공세를 유지하는 전략이다.¹⁵⁾ 즉, 전체적인 국면

13) 손자, 『손자병법』, 제4장 균형편(軍形篇).

14) 클라우제비츠는 방어가 순전히 방어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방어와 공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방어란 상대적으로 방어의 요소가 공격의 요소보다 더 많을 뿐이지 공격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방어도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Carl von Clausewitz, *On War*,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eds. and tran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357.

15) 박창희, 『현대중국 전략의 기원』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1), pp.103-104.

에서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적의 약점을 골라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 전략의 통상적인 모습은 적이 공격해올 경우 방어 위주의 작전을 전개하다가 적의 전투력이 약화되면 그대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게 된다. 따라서 적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반격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공간에서의 공세적 방어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3,000km 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 즉, 무기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

‘2 선 전략’ : 반경 2,000km 까지의 핵심해양공간에 대해서는 ‘방어적 공세’ 전략¹⁶⁾이다. ‘방어적 공세’는 전반적인 전쟁의 형태가 공세이지만 그렇다고 적을 먼저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적의 공격에 대해 방어태세를 취하지만 곧바로 공세로 전환하여 전격적인 작전으로 신속결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전체적으로 짧은 기간의 방어와 신속한 공세전환, 그리고 비교적 짧은 공격으로 전격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의 통상적인 모습은 적의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가 있을 후 곧바로 적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게 된다. 대대적인 반격을 위해서는 그만큼 공격적인 무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선 전략’ : 반경 1,000km 까지의 핵심해양공간은 ‘적극적 공격’ 전략이다. 적극적 공격전략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군사적,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서 적을 격멸하는 전략이다. 공세적 방어 전략과 방어적 공세전략이 격멸보다 격퇴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다면, 적극적 공격 전략은 적의 격멸에 초점을 두고 있다.¹⁷⁾

앞의 <그림 3>에서 보면 반경 1,000km 이내는 우리나라의 삼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적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적을 격멸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같은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야말로 주변국에게 한국의 해양전략이 방어적인 것보다 공격적인 전략이라는 인식을

16) 공세적 방어전략의 경우 가용한 전투력이 충분하지 못해 적의 공격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약화시키는 데 주안을 두는 반면, 방어적 공세전략은 기본적으로 기동과 화력면에서 상대보다 우세한 전력을 갖춘 상태에서 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격퇴 및 격멸시키고 전쟁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데 주안을 두는 전략이다.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pp.225-226.

17) 격퇴란 적 군사력을 국경선 너머로 물리치는 것이며, 격멸이란 적 군사력을 섬멸하고 와해시키는 것을 말한다.

심어주게 되고, 한국과의 대립에 있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하기가 망설여 질 것이다.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격은 적의 영토를 탈취하거나 적 부대를 격멸한다는 적극적인 목표를 갖는 반면, 방어는 적의 정복을 거부하고 자신의 영토와 병력을 보존하는 등의 소극적인 목표를 갖는다. 하지만 공격과 방어의 균형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강한 형태의 것인지는 단정 짓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전쟁은 공격만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공격과 방어, 심지어는 양측 모두 방어를 취하는 무 행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가 피동적인 작전이 아니라 적시에 적절하게 적에게 공격을 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능동적인 형태의 작전이 되어야 한다.

방자는 공세적인 거부전, 즉 방어를 위주로 하면서 공세적인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공격 및 방어의 이점을 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적을 공격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하는 공격의 이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방어도 공격과 마찬가지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추구한다. 비록 방어가 외형적으로 볼 때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체는 반격을 가하는 데 있다. 즉, 방어의 목적은 적을 단순히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격멸하는 것이며, 따라서 방어는 순수한 방어나 수동적인 방어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국의 해양전략은 방어의 강함을 목표로 해야 한다. 클라우제비츠는 방어의 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번뜩이는 복수의 칼날과 같이 공격으로의 갑작스럽고 강력한 전환이야말로 방어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다.

핵심해양공간의 3선 공·방 전략의 디자인은 1선에서 3선으로 갈수록 방어적에서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이 한국해군보다 더 강한 해군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해양전략은 방어의 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해양전략은 위에서 언급한 3선 공·방 전략을 다 포함하는, 즉 방어를 위주로 하면서 공세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개념인 ‘공세적 해양거부전략(Offensive Maritime Denial Strategy)’이다.

Ⅲ. 해양공간 확장에 따른 한국 해양전략 발전 방안

아래 <표 2>를 보면 동북아 지역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동북아 주변 국가들은 해군력을 키우며 해양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3월, 2,100명 규모의 수륙기동여단(해병대)을 창설했다. 일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를 방어하기 위한 전력으로 이는 도서 확보 즉, 점 전략을 통한 해양공간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통한 해양공간 확장을 살펴보고 앞에서 설명한 한국의 해양공간 확장에 따른 3선 전략개념을 통해 한국 해양전략의 발전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표 2> 동북아 지역 각국 군사력 비교¹⁸⁾

구분	러시아(극동)	중국	북한	한국	일본	주일(한)미군
육군	8만명	160만명	100만	52만	14만 해병대 2,100명	1.9만 (1.7만)
해군	함정 250척 55만톤	950척 134.1만톤 해병대 1만	650척 10.7만톤	190척 18.1만톤 해병대 2.7만	143척 44.8만톤	7함대 20척 33.6만톤 함재60
공군	작전기 400기	2040기	620기	570기	430기	140기 (60기)

1. 중국의 해양공간 확장

아래 <표 3>과 <표 4>에서 보듯이 중국의 해양전략 변화는 해양공간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해군은 1980년대 후반 ‘연안방어’에서 ‘근해방어’로 전환했고, 2015년 5월 공개한 국방백서에서는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遠海護

18) 『朝日新聞』 (2017. 8. 30).

衛)’ 라는 전략개념을 제시하면서 해양공간을 확장했다.

중국이 해양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한 것은 2012년 11월, 제18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여기서 중국은 해양굴기(海洋崛起) 없이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해양강국건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2013년 4월 발간된 중국 국방백서는 해양이야말로 “중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이며, 해양을 개발·이용·보호하며,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발전전략”이라고 언급했다. 2015년 5월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중국은 기존의 대륙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해양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선회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¹⁹⁾

〈표 3〉 중국의 해양전략 변화

1949~1970년대	1980~2000년대	2015년~
연안방어	근해방어	근해방어·원해호위

※ 출처 : 해군전략분석시험평가단, 『주변국 해군 편람』 (2017).

〈표 4〉 중국 해양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3단계 발전 방향

구분	시기	목 표	전력 건설
1단계	1980~2000년대	제1도련 내 해양통제	무기체계·플랫폼 현대화
2단계	2000~2020년대	제2도련 내 해양통제	항모전단
3단계	2020~2050년대	전략적 거부·억제·통제	원양함대

※ 출처 : 해군전략분석시험평가단,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 (2018). p.69.

중국이 해양공간의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 〈그림 4〉에서 보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다.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19) 여기서 근해란 류화칭 제독이 제기한 제1도련, 즉 일본열도와 대만, 필리핀, 그리고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중국이 원해호위를 추가한 것은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근해에서의 방어만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해양이익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즉 중국은 영해주권을 넘어서 SLOC 보호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등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의 해양이익을 수호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근해에 대한 해양통제 혹은 해양우세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해양공간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中國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년 5월.

해양실크로드를 합친 개념이다. 먼저 ‘일대(一帶)’는 대륙중심의 지정학적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철도를 연결하여 중국-몽골-아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유럽, 중국-중남아시아 등 3개 국제경제 협력 회랑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대륙 중심의 지정학적 사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로(一路)’는 해양중심의 지정학적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미얀마-방글라데시-인도-파키스탄-아라비아해-아프리카 연안을 잇는 해양 실크로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대륙과 해양에서의 지정학적 우위를 점한다는 것으로 미국에 대적할 만한 엄청난 구상이다. 특히 일로는 해양국가인 미국의 태평양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중심의 해양벨트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²⁰⁾

〈그림 4〉 중국의 ‘一帶一路’ 구상



2017년 중국은 ‘중·러 해상연합 2017’ 훈련을 발트해에서 실시했다. 2012년 칭다오 인근 서해 해역에서 시작된 이 훈련은 2015년 지중해에 이어 2017년에는 발트해로 작전해역을 확대했다. 이 훈련 시 중국은 중국의 첫 해외 군사 주둔기지인 아프리카 아덴만 서부의 지부티에서 출정식을 열었다.²¹⁾ 그리

20) 박창희, “중국의 해군력 발전과 지역 해양안보 협력 방안,” 『STRATEGY21』, Vol.19, No.2 (Winter 2016), p.172.

고 중국은 중국 잠수함을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인도양 연안국에 공짜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는 태평양과 인도양으로의 작전능력 확대를 위한, 즉 원해호위 전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²²⁾ 한편 중국은 남태평양의 괌 인근 마이크로네시아 섬에 중국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군사기지 건설을 계획 중이다. 이곳에 중국의 군사기지가 세워지면 중국의 제2 도련선(일본-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을 돌파해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²³⁾

이러한 현상들을 중국의 해양공간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남중국해 지역은 중국의 핵심해양공간으로서 자리잡을 것이다.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경우 중국 연안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남사군도 지역의 천연자원을 확보함은 물론, SLOC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남중국해의 인공 섬들을 전진기지화 시키고 이를 중국의 해군력 투사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중국의 해양공간의 확장 구상을 위한 전략은 수단으로써 해군력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아래 <표 5>에서 보듯이 중국은 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2척을 국내기술로 건조하고 있으며 향후 총 4척 체제를 보유할 예정이다. 이지스급 함정은 현재 15척 보유하고 있고, 향후 22척을 보유할 예정이다. 잠수함 또한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은 현재 12척 보유하고 있으나 30년 정도에는 22척을 유지할 예정이고, 디젤 잠수함은 향후 40척 보유 예정이다. 한편 수상, 수중 플랫폼의 증강과 더불어 거부전력의 핵심인 미사일(대함탄도미사일(ASBM), 대함순항미사일(ASCM), 지상공격순항미사일

21) 중국은 이 훈련을 위해 하이난 쑤야항을 출항하여 남중국해-말라카해협-아덴만-수에즈운하-지중해-지브롤터해협-영국해협을 지나 1만9000km를 항해했다. 중국 해군의 해외 연합훈련사상 최장 거리다. 또한 중국은 장기 임대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군사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대양해군의 야망... 지구 반바퀴 돌아 발트해서 러시아와 훈련, 『중앙일보』 (2017. 7. 24).

22) 방글라데시는 2013년 중국에서 디젤기관을 갖춘 '밍급' 중공 잠수함 2척을 구입했고, 태국은 2017년 4월 밍급의 차세대 기종에 해당하는 '위안급' 잠수함 1척을 구매키고 결정했으며, 파키스탄은 2015년 시진핑 주석 방문 당시 8척을 구입하는 방안을 중국측과 논의하기 시작했다. “中, 잠수함 세일, 인도양 해저 정보 노림수?,” 『한국일보』 (2018. 1. 16.).

23) 마이크로네시아는 1986년 미국과 안보관련 조약을 맺었고, 2023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마이크로네시아 국가들에게 대규모 전력시설, 교량, 농장, 학교 등의 건설을 지원하는 등의 경제원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마이크로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남태평양에 6개 수교국을 갖고 있는 대만에 외교적 압박 또한 될 수 있다.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은 팔라우와 솔로몬제도 역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中, 괌 미군기지 겨냥한 군사시설 계획,” 『동아일보』 (2017. 10. 11).

(LACM), 대공미사일(SAM) 등) 또한 증가시키고 있다.

이처럼 중국해군은 기본적으로 근해에서의 해양통제력을 강화하고 원해에서의 SLOC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원해에서도 해양통제 또한 해양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이를 위한 해양공간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다.

〈표 5〉 중국 해군의 주요함정 보유 현황

구 분	함 종		현 보유	확보예정
수상함	항모	랴오닝(001형)	1	-
		002/003형	-	3
	이지스함급	Luyang-Ⅱ급(052C형)	6	-
		Luyang-Ⅲ급(052D형)	9	4
		Renhai급(055형)	-	3
	구축함	Luyang-Ⅰ급(052B형) 등	15	-
	호위함	Jiankai-Ⅱ급(054A형)	25	5
		Jiangwei-Ⅱ(053H3급) 등	23	7
	상륙함	075형		1
		Yuzao급(071형)	5	1
		Yuting-Ⅰ/Ⅱ급(072Ⅱ/Ⅲ형)	25	-
	계(척수)			109척
잠수함	원자력	Han급(091형, SSN)	3	-
		Shang급(093형, SSN)	4	7
		Jin급(094형, SSBN)	5	3
	디젤	Kilo/Yuan급	26	14
	계(척수)			38척

※ The Military Balance(2018).

2. 일본의 해양공간 확장

일본은 2007년 7월 1일 일본의 해양 정책을 법제화로 정착시킨 규범의 근원인 ‘해양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다에 의해 지켜진 일본에서 바다를 지키는 일본으로’라는 적극적인 해양 정책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다.²⁴⁾ 이를 계기로 일본의 해양 정책은 일원화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도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고 총리를 해당 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외무성은 외교 정책 전반의 종합적 기획, 입안, 조정 및 정책 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으로 ‘해양에 관한 외교정책 본부’를 신설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그동안 주변 해역에서 외교적 대립을 감수하면서 자원 개발과 관할권 확대를 추구하였던 일본에게 해양이 자원 확보라는 수단적 의미를 초월하여 국익을 기반으로 한 영해 수호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아베 정부는 2013년 12월, 최초로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아베정부는 일본의 정체성을 경제대국, 해양국가, 그리고 평화국가라고 정의했다. 일본을 해양국가라고 규정한 이유는 일본이 바다로 둘러싸여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고 있고, 긴 해안선의 혜택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해양무역과 해양질서를 추구해 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해양국가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서와 그 군사적 지침서에 해당하는 방위계획대강은 국가안보정책의 영역으로 해양안보를 우주 및 사이버 안보와 마찬가지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같이 일본이 해양국가라는 정체성은, 아래 <표 6>에서 보듯이 일본의 해양전략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해양공간의 확장이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24) 해양기본법은 총 4개의 장과 38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해양기본법의 목적이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사회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해양과 인류의 공생에 공헌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① 해양개발이용과 해양환경보전과의 조화, ② 해양 안전 확보, ③ 해양에 관한 과학적 지식 충실, ④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 ⑤ 해양의 종합적 관리, ⑥ 해양에 관한 국제적 협조라는 6개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종합적·기계적 해양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책무,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지역적 시책을 수립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시행하는 해양정책에 협조하는 사업자 및 국민의 의무, 해양에 대한 이해증진 노력, 해양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및 재정적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은봉·석주희, “일본의 해양기본법(2007) 성립의 배경과 동인: 해양권인 확대와 쟁점 관리 네트워크,” 『일본연구』 제44호(2010), p.51.

〈표 6〉 일본의 해양전략 변화

2차대전 이후~1970년대	1980~1990년대	2000년~
200해리 전수방위	1,000해리 전수방위	적극적 전수방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적 안보 ·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이익에 능동적 관심 · 소련/중국의 군사위협에 대응 · 북한의 도발에 주목 · 1,000해리 SLOC 보호 · 3개해협(쓰시마, 쓰야, 쓰가루) 방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응 · 해양을 국가이익의 핵심으로 인식 · 효과중심적 안보 · 비국가행위자 위협 부상 · 중국 해군력 급성장 · 일본해군 세계임무 확대 · 공세적인 해양전략

※ 출처 : 해군전략분석시험평가단, 『주변국 해군 편람』 (2017).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 후 1970년대까지 ‘200해리 전수방위’ 전략을 유지했다. 이를 일본의 해양전략 발전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방어적 해양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의 해군전략은 국가안보전략서에 맞추어 해양방위전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2단계 해양전략의 발전으로서 ‘1,000해리 전수방위’ 전략을 도입했다. 이 전략 하에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1,000해리 해상 교통로 보호와 3개해협(쓰시마, 쓰야, 쓰가루) 방위’를 기본적인 방위전략으로 채택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은 ‘적극적 전수방위’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는 방어적 전수방위에서 탈피한 전략으로 안보영역, 즉 해양공간을 확대하고 공세적인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안보전략가의 조화를 이루는 해양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해양전략의 변화는 일본 방위안보정책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일본은 외교안보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제기되었을 시 「방위계획대강」이라는 전략문서를 발표하여 국가가 나가야할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비해왔다.²⁵⁾ 방위계획대강은 전후 총 5번 개정되었고, 개정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의 개정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그만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과 변화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을 일본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표 7〉는 일본 방위계획대강의 주요 요점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전후 일본은 본토 방위에 국한된 ‘전수방위(傳受防衛)’ 원칙이 방위안보정책

25) 김훈상, 『패러다임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지식과 감성, 2013), pp.285-86.

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1995년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방위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4년 방위계획대강부터 중국과 북한이 실명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2013년 방위계획대강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8월, 아베 총리는 “일본의 안보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늘고 있다. 이제 육해공이라는 기존의 방위 구분에 얽매인 발상으로는 일본을 지켜낼 수 없다”며 연말까지 방위계획대강 정비를 검토 지시했다.²⁶⁾

〈표 7〉 일본 방위계획 대강의 주요 요점 비교²⁷⁾

구분	방위계획대강 1976	방위계획대강 1995	방위계획대강 2004	방위계획대강 2010	방위계획대강 2013
안보 환경 평가	- 냉전 시기 - 한반도 긴장지속 - 주변국가 군사력 증가	- 냉전 종료 - 지역분쟁 - 핵과 미사일 확산	- 북한 위협 - 중국 주의	- 글로벌 위협 - 북한 불안정 요인 - 중국 동향 주의	- 글로벌 위협 - 북한 위협 - 중국 위협
일본 능력 구비 개념	- 적절한 방위력 구비	- 기반적 방위력 합리화, 효율화 등	- 기반적 방위력 -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 기반적 방위력 개념 폐기 - 동적 방위력 개념 제시	- 통합기동방위 력 개념 제시

이러한 위협인식 변화와 더불어 자위대가 증강해야 할 군사력의 기준 개념에 대해서도 공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종전의 대강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의미하는 ‘기반적 방위력’ 개념이 자위대 군사력의 지표로 제시되었으나, 2004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에 추가하여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2010년과 2012년에 발생한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일·중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의 위협론은 실체가 되었다.²⁸⁾ 2010년 방위계획대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해양위협에 대응한 방위력 강화였으며, 이를 위한 ‘동적 방위력(Dynamic Defense Force)’ 개념을 제

26) “아베 사이버·우주 분야 방위력 강화해야...군사력 강화 의도 드러내,” 『헤럴드경제』 (2018. 8. 29).

27) 국방정보본부, 『2016년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16), p.171.

28) 정광호, “센카투 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영토분쟁: C.R. Mitchell의 분쟁구조 이론을 중심으로,” 『韓國軍事學論集』 제69호 2권(2013.6), pp.138-144.

시한 것이다.²⁹⁾ ‘기본적 방위력’ 개념이 폐기되면서 ‘동적 방위력’³⁰⁾ 개념으로 대체된 것이다.

2013 방위계획대강에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일본의 안전에 대해 중대하면서도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중국 해·공군의 태평양 진출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의 행위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는 ‘통합기동방위력’을 구축하고, 미일동맹에 관해서는 억제력 및 대처력의 강화를, 아·태지역 내의 협력에 관해서는 한국, 호주, 아세안 국가 등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각각 방위정책 상의 과제로 제기하였다.

여기서 새롭게 제시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은 종전 방위계획대강에서 표명되었던 ‘동적방위력’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위대의 통합적 운용능력을 강조하고, 고정적인 지역배비가 아닌 각 자위대의 기동적 배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자위대의 육·해·공 자위관 요원의 상호 배치, 육상자위대 주요 부대의 기동부대화, 수륙기동단 창설, 수륙양용작전 및 특수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운용부대의 보유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기하였다.³¹⁾

아베 내각이 2013년 12월에 공표한「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현재 지역안보의 위협을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해양진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독자적 방위력 및 미일동맹의 강화를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 ‘동적방위력’ 개념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기동방위력’은 자위대의 통합운용 및 기동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센카쿠 열도에서 분쟁을 가정하고, 낙도탈환 능력의 강화를 위한 ‘상륙기동단’의 신설과 투사능력,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를 제시하고 있다.³²⁾

29) 손경호, “일본의 2010방위계획대강 개정의 방향과 함의,”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6(2013), pp.83-87.

30) 2010 방위계획대강 작성 작업에 직접 참여한 일본 방위연구소의 다카하시 스키오 연구원은 동적 방위력 개념이 평시의 억제, 유사시의 대처 기능에 더해 테러리즘이나 해적 등의 회색지대(grey zone)적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력 즉 정찰감시능력, 신속기동능력, 타국과의 연합작전능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Takahashi Sugio, “Changing Security Landscape of Northeast Asia in Transition: A View from Japan”(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제심포지움 발표논문, 2012. 7. 5).

31) 박영준, “일본 군사력의 평가: ‘동적 방위력’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서의 행보,” 『新亞細亞』 22권 2호(2015), p.66.

32) “일본 방위백서, 아베 집단지위권 ‘홍보용’,” 『연합뉴스』 (2014. 8. 5); “日 NSS·국가안보전

이처럼 일본은 자위대의 통합적 운용능력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해군력도 아래 <표 8>에서 보듯이 증강시키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 처음으로 원거리 도서방위의 목적으로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 여단을 창설했다. 항공모함으로 개조 가능한 이즈모급 헬기탐재호위함 2척을 보유하고 있다.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도 '21년까지 8척으로 증강 예정이다. 호위함도 '21년 22척으로 증강되고 9,000톤급 상륙함도 3척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은 향후 24척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일본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해양공간을 확장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해군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일본 해군의 주요함정 보유 현황

구분	함종		현 보유	확보예정
수상함	헬기탐재 호위함	Hyuga급('09~'11년)	2	-
		Izumo급('15~'17년)	2	-
	이지스함	Atago급	2	2
		Kongo급	4	-
	구축함	Akizuki급	4	Asahi급 2척 5,100톤
		Asagiri급	8	-
		Murasame급 등	14	-
		Hatsuyuki급 등	4	-
	호위함	Abukuma급	6	22 4,000톤
	상륙함	Oosumi급	3	-
계(척수)		49척	26척	
잠수함	디젤	Souryu급	8	4
		Oyashio급	11	-
		Harushio급	1	-
	계(척수)		20척	4척

※ The Military Balance(2017), SIPRI(2107) 참고.

략, 힘으로 맞서겠다는 자세 명확히,” 『아시아 신문』 (2013. 12. 18).

3. 한국의 해양전략 발전 방안 : 공세적 해양거부전략

한국의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고, 주변국 잠재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해양공간을 확장하면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것을 앞의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해양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해양공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고, 이 인식을 통해서 3선의 핵심해양공간 디자인을 통해 한국의 해양전략을 ‘공세적 해양거부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공세적 해양거부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가. 수상 및 수중 플랫폼 발전 : 기동부대와 원자력추진 잠수함

앞서 언급했듯이 공간의 인식은 운동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핵심해양공간의 1선은 반경 3,000km로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1선에 해당되는 공간에 운동에너지를 보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해양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경 3,000km면 남중국해까지의 반경이다. 여기까지 운동에너지를 보내려면 한국은 기동부대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기동부대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동의 사전적 의미는 적 중심에 대한 공격, 유리한 위치획득, 적의 작전지속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과업은 ① 작전수행지역으로 부대의 전개, 교대, 재편성, 이동, ② 적보다 유리한 위치로 이동, ③ 적 부대의 기동을 지연, 유인, 정지 강요(기뢰부설, 봉쇄작전), ④ 작전수행지역 내 중요 해역 통제(해양차단, 해양통제) 등이다.

기동의 중점은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소모전보다 작전적 기동으로 적 부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적의 사기와 응집력을 분쇄하여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공격 시 기동은 주도권 탈취, 전투, 주요작전 여건 조성, 전과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방어 시 기동은 부대 절약, 적 부대 기동 제한, 적 공격 회피를 위해 실시한다.³³⁾ 즉 기동은 운동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33) 전략적 수준에서의 기동은 해군부대를 작전수행지역으로 전개하여 배치하는 것이다. 전략적 기동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나, 전쟁 발발 이전에 작전수행지역에서 상대적 전투력의 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용한다. 작전적 수준에서의 기동은 통상 대규모 부대를 작전기지에서 작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전투부대와 이를 지원하는 군수자원의 이동을 포함한다. 작전적 기동은 전투의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는 수단이나 현재 상황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실시하며, 목표는 적 중심이나 결정적 지점이다. 전술적 수준에서 기동은 통상 적보다

따라서 기동부대(Task Forces)는 ‘특정한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단일지휘관 아래 편성되는 단위부대들의 편성체’, 기동함대(Task Fleet)는 ‘특정 임무 또는 지속적인 임무수행을 담당하는 함정이나 항공기로 편성된 기동지휘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같은 기동부대의 특징은 유연성을 포함하여 많은 운동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이다. 기동부대는 원하는 목표를 위해 원하는 지역에 기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에서 말하는 유연성이란 다양한 임무의 성격에 맞게 전력들을 구성하고 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핵심해양공간에 운동에너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기동부대 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기동부대는 각 해역함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공격 및 방어작전, 상륙작전 등 다양한 성분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해에서 해상교통로(SLOC)을 보호하고 필요시 단독, 합동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시에는 전면전 등 다양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평시에는 평화유지군, 군사외교 및 해외 위기관리 등의 국가정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해군의 주 전력은 해역방어에 필요한 전력과 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해에서 작전 지속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하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동부대는 해역함대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면서 3,000km까지의 핵심해양공간을 방어할 수 있는 전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기동부대 전력은 1개 전단, 2개 전대, 총 9척(6KDX-II, 3KDX-III)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전력으로는 변화된 안보환경 하에서의 주변국에 대한 거부전력으로는 부족하다.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개편을 해야 되고, 수중작전 능력을 보완한 3~4개 전대 체제로 운영되어야지만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 한편, 기동부대 전력 중에서 수중작전능력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동부대는 수상·수중·항공의 입체균형전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 잠수함들과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생존성과 기동성이다. 디젤 잠수함은 고속으로 장시간 기동할 수 없고 주기적인 스노클로 인해 소음이 발생

유리한 위치로 이동하는 것으로 부대가 전투지대에서 배진과 진형을 갖추고 적의 기동에 대응한다. 해군본부, 『해군작전』 (2018), pp.14-15.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214급에 장착된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체계가 개발되었지만, 이 또한 고속기동이 불가능하고 작전 지속 기간이 길지가 않다. 디젤 잠수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기동부대 전력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핵심해양공간의 전력투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나. 미사일 전략의 필요성 : 순항미사일(CM) + 탄도미사일(BM)

러·일전쟁의 분수령이었던 쓰시마해전은 함포전에 의한 결전이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해전의 양상은 함포전에서 미사일전으로 변화되었다.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는 미사일을 탑재하는 플랫폼이란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만약 작금의 시기에 두 국가 간 해전이 일어난다면 그 양상은 해상 봉쇄와 미사일전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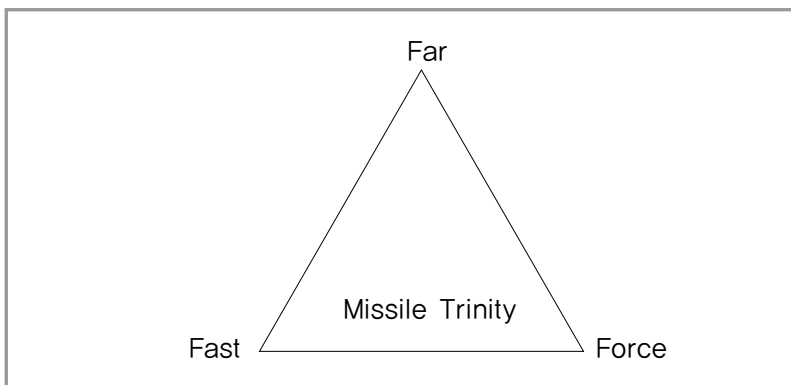
서두에 언급했지만, 변화된 안보환경 하(1축→4축 위협)에서 한국의 위협은 바다를 통해 직면할 것이다. 한국의 대도시, 전력시설 등 핵심시설은 대부분 연안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국은 한국보다 우세한 해군력을 통해 해양을 통제하려 할 것이며, 확전 시 바다로부터 전력을 투사하려 할 것이다.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핵심전력이 미사일이다. 그리고 핵심해양공간을 거부할 수 있는 전력 또한 미사일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 해군은 일원화된 미사일 전략의 부재 속에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백발의 미사일이 머리위로 날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 미사일에 대한 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Sensor to Shooter로 이어지는 무장-전투체계-센서체계를 위한 전투체계 발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사일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미사일은 순항미사일(CM: Cruise Missile)과 탄도미사일(BM: Ballistic Missile)로 분류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CM)은 비행기처럼 날개와 제트엔진을 사용해서 수평비행을 하고, 일정 고도와 속도로 순항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미사일의 총칭이다. 최근의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지고, 추진력은 주로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음속(마하 0.8~0.9)으로 비행한다. 초저공비행이 가능하여 탄도미사일보다 레이더가 포착하기 힘들다. 램제트엔진(Ramjet Engine)을 사용한 초음속 순항미사일(마하2~3)도 있다.³⁴⁾

34) 함(잠)대지 순항미사일의 경우 장거리 비행에 따른 명중률 향상을 위해 관성 항법장치의 정밀도 향상이 중요하고 또한 목표에 이르는 지형 데이터를 조합하는 방식인 지형대조유도방식

탄도미사일(BM)은 포물선과 같은 일정한 탄도 궤적을 그리면서 고속으로 대기권과 우주공간을 함께 비행하는데, 로켓 추진력에 의해 미사일의 사거리가 결정되고, 비행하는 거리에 의해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와 대기권 재진입 속도 등이 결정된다.³⁵⁾ 탄도미사일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기존 항공기보다 매우 작아 탐지 및 추적이 어렵고 항공기에 비해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속으로 침투하는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요격미사일은 짧은 반응시간과 정확한 파괴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림 5〉 미사일 삼위일체(3F: Far+Force+Fast)



이처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서로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냐에 따라서 타격 및 억제 능력은 커진다. 저자는 위의 〈그림 5〉에서 보듯이 미사일이 갖추어야 되는 핵심 능력을 3가지로 분석하였다. 즉 미사일이 얼마를 가야되고, 얼마나 빨라야 되며, 얼마나 파괴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임무와 활용도가 다르게 부여된다. 핵심해양공간의 1선(3,000km)에 대한 거부능력을 가지려면 속력과 파워는 포기하더라도 거리와 정확도를 가지

(TERCOM: Terrain Contour Matching)도 겸용된다. 최근에는 이것에 추가하여 GPS 항법도 이용된다. 특히 바다 위에서는 고도를 5m 정도로 유지하는 해면밀착비행을 하기도 한다. 김석곤·윤종준·강정석·김정규·김태훈, 『해군무기의 세계』(서울: 한티미디어, 2016), pp.270-271.
 35) 탄도미사일은 발사 초기에 로켓으로 일정 높이까지 상승하다가 유도장치에 의해서 표적 방향으로 일정한 고각과 양각 및 속도를 갖게 된 이후 자유탄도로 정해진 목표까지 비행한다. 발사 및 추진 단계로 불리는 첫 단계에서 로켓엔진이 미사일을 특정 탄도궤도에 올려놓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이후 지구 대기권 밖에서는 중기 유도 단계의 비행을 하는 것이다. 진공상태에서 비행체의 탄도는 원하는 궤도에 진입한 후 추진체의 연소를 중지시켜 목적지까지 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종 비행 단계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탄두를 대기권으로 다시 끌어들이며 목표지점으로 떨어뜨린다. 김석곤·윤종준·강정석·김정규·김태훈, 상계서, pp.273-274.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반면 3선에 대한 거부능력을 위해서는 빠른 속력과 강력한 파워를 지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수상·수중·항공 플랫폼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미사일의 생존성과 치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임무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해양전략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사일 전략을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도서기지의 요새화 : 불침항모

태평양 전쟁 시 일본의 불침항모(남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섬들의 요새화)는 유명하다. 미국의 태평양 전략 중 가장 큰 전략적 실수는 1919년 마이크로네시아 섬을 일본에게 양보한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이 태평양도서를 위임 통치한다는 것이 베르사유조약 제22조로 성립되었다.³⁶⁾ 일본은 마이크로네시아 독일령 제도(마리아나제도, 캐롤라인제도, 마셜제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향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게 심각한 군사전략적 손실을 주었다.

도서라는 ‘점’의 획득 실패가 결국에는 미국의 태평양 최종 방어선이 하와이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다. 만약 미국이 마이크로네시아 도서들을 차지했다면 하와이와 필리핀 사이 미국의 전진기지가 구축되었고, 미국의 핵심해양공간이 광까지 확장되었을 것이다. 이후 일본은 이 도서들을 요새화시켰고, 태평양 전쟁 시 미국은 이 요새화된 일본의 핵심해양공간을 돌파하는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총 3348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유인도는 470개(84만4156명), 무인도는 2878개로 무인도가 우리나라 도서들 중 86%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전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잠재적으로 수많은 불침항모를

36) 이 조약에서 비록 일본은 구독일령 남양제도의 섬들을 군사기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해양영토를 확보한 것이었다. 야프섬은 괌에서 필리핀 마닐라의 해상교통로를 공격하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기지가 될 수 있었고, 팔라우제도와 괌 남동쪽의 다른 도서는 일본의 잠수함 및 함정을 위한 기지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야프섬과 구독일령 태평양 도서들을 획득함으로써 ‘점’의 획득을 통해 미국과 분쟁 발생 시 필리핀 및 괌을 포위할 수 있는 해상방어구역, 즉 ‘면’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Hector C. Bywater, *Sea Power in the Pacific: A Study of the American-Japanese Naval Problem*(Boston: Houghton Mifflin, 1921), pp.266-268.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인 1945년 2월, 미국은 일본이 요새화 시킨 유황도(이오지마)를 탈환하기 위해 상륙작전을 실시했는데, 한달만에 미군 약 3,00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조금만 섬을 탈환하는데 이처럼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만약 한국의 도서들을 요새화 시킨다면 감히 우리해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겠는가. 서두에서 언급한 핀란드의 국방정책처럼 우리의 핵심해양공간을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거부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IV. 결론

조선시대 세종대 조선 수군병력은 그 당시 국가 전체 병력의 절반인 5만명이었고, 군선 척수 또한 800여척이었다. 또한 화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종은 사포국과 총통위를 신설하였다. 사포국은 염초 생산의 비밀 유지와 생산량 증가를 위해 궐내에서 설치한 기관이고, 총통위는 별군·총통군 외에 화기 방사군을 증강하기 위해 설치한 특수 부대였다.³⁷⁾ 이처럼 조선 수군은 조선 역대 왕들이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힘입어 국가적으로 체계를 세우면서 발전하였다. 아마도 그 당시 세계사적으로도 조선 수군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조선 중기로 가면서 조선의 위정자들이 조선의 바다를 생존의 바다가 아닌 낭만의 바다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다.

현재 우리는 역사상 또 한번 부국강병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동북아에서는 강대국들의 틈에 놓여있다. 이 와중에서 그동안 북한이란 주적에 집중한 나머지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인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안보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늦었지만 바다로 눈을 돌려야 되는 시점에 온 것이다.

바다로부터 오는 적은 바다에서 막아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해군력은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독트린보다는 방어적인

37)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서울: 청어람미디어, 2014), pp.36-41.

독트린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핀란드의 국가방위전략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진 해양전략이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쉽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각자의 전략적 기준에 맞춘 해양공간을 설정해서 그 공간을 거부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 즉 무기체계를 발전시키는 해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한국의 핵심해양공간을 3선 개념의 공·방 전략으로 디자인을 했고, 이 3선의 핵심해양공간을 거부할 수 있는 한국의 해양전략을 ‘공세적 해양거부전략’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해양공간에 운동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즉 전략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동부대와 원자력 추진잠수함의 발전, 한국의 미사일 전략 수립의 필요성 그리고 도서기지의 요새화 등을 제시하였다. 바다로부터 오는 위협을 거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 판단했다.

미·중·일·러처럼 역사적으로 각 국가의 해양전략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해양전략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은 시도를 해봤으나 어려웠다. 왜냐하면 한국의 해양전략의 개념은 해군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독트린이었지 국가 차원에서 나온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해양전략이 위정자의 독트린으로 제시되는 시점에 온 것 같다. 한국의 전략 브레인들은 이제는 한국의 바다에 눈을 돌려야 된다. 바다로부터 오는 위협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온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석곤·윤중준·강정석·김정규·김태훈, 『해군무기의 세계』(서울: 한티미디어, 2016).
-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서울: 法文社, 2010).
- 김훈상, 『패러다임의 국가안보전략』(서울: 지식과 감정, 2013).
- 구민교, “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2016).
- 박영준, “일본 군사력의 평가: 동적 방위력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서의 행보,” 『新亞細亞』(2015).
- 박창희, “중국의 해군력 발전과 지역 해양안보 협력 방안,” 『STRATEGY21』, Vol.19, No.2(Winter 2016).
- _____, 『군사전략론』(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 _____, 『현대중국 전략의 기원』(서울: 플래닛미디어, 2011).
- _____, “동북아의 지전략적 핵심공간과 근대 일본의 현상 도전,” 『아시아연구』(2010).
- 손경호, “일본의 2010방위계획대강 개정의 방향과 함의,”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6(2013).
- 정광호,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 전개에 관한 연구: 도전국가의 핵심해양공간 진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 _____,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영토분쟁: C.R. Mitchell의 분쟁구조 이론을 중심으로,” 『韓國軍事學論集』(2013).
- 이민용, 『임진왜란 해전사』(서울: 청어람미디어, 2014).
- 유현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서울: 을유문화사, 2015).
- 최은봉·석주희, “일본의 해양기본법(2007) 성립의 배경과 동인: 해양권인 확대와 점점 관리 네트워크,” 『일본연구』(2010).
- 해군본부, 『해군작전』(2018).
-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주변국 해군 편람』(2017).
- _____,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2018).
- Buzan, Barry,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1).
- Bywater, Hector C., *Sea Power in the Pacific: A Study of the American-Japanese Naval Problem*, Boston(Houghton Mifflin, 1921).
- Carl von Clausewitz, *On War*.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eds. and tra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Takahashi Sugio, “Changing Security Landscape of Northeast Asia in

Transition: A View from Japa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제심포지움 발표 논문, 2012. 7. 5.).

Wise, Stephen R., *Lifeline of the Confederacy: Blockade Running During the Civil War* (Columbia: Univ. of South Carolina Press, 1988).

中國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 5).

“日 잠수함 부대 남중국해서 첫 훈련,” 『서울경제』 (2018. 9. 18).

“남중국해엔 한해 3800조원이 흐른다...그래서 사활 건 美·中,” 『서울신문』 (2018. 6. 26).

“일본 방위백서, 아베 집단자위권 ‘홍보용,’” 『연합뉴스』 (2014. 8. 5).

“중국 대양해군의 야망... 지구 반바퀴 돌아 발트해서 러시아와 훈련,” 『중앙일보』 (2017. 7.24).

“中, 잠수함 세일, 인도양 해저 정보 노림수?,” 『한국일보』 (2018. 1. 16).

“中, 괌 미군기지 겨냥한 군사시설 계획,” 『동아일보』 (2017. 10. 11).

“아베 사이버·우주 분야 방위력 강화해야... 군사력 강화 의도 드러내,” 『헤럴드경제』 (2018. 8 29).

“日 NSS·국가안보전략, 힘으로 맞서겠다는 자세 명확히,” 『아시아 신문』 (2013. 12. 18).

“日, 중국·북한 구실로 ‘안보 3중세트’ 확정,” 『조선일보』 . 2013.

『朝日新聞』 (2017. 8. 30).

Abstract

Future Direction of ROK Navy's Maritime Strategy based on the Recognition and Expansion of Maritime Sphere

Jung Gwang-Ho*

So far, the main threat to South Korea was North Korea. That is why South Korea established a strategy based on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most of the budget on defense was used to deter North Korea. Even though the neighboring countries(China, Japan, and Russia) are growing as a real threat with abilities and intentions based on their powerful naval forces, South Korea has not yet been able to establish a strategy that regards neighboring countries as a threat. But the decades-old structural mechanism of the Korean security environment is undergoing a radical change on April 27, 2018, through the South-North summit and the Panmunjom Declaration. Under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South Korea was placed in a complicated dilemma that had to deal with threats of two axes(China), three axes(China, Japan), and four axes(Japan, Russia). If the one axis threat(North Korea) is dominated by land threats, the second, third and fourth axis threats are threats from the sea. This paper analyzed the maritime strategy of Korea within the framework of maritime-geopolitics, in other words recognition and expansion of the sphere of maritime. I have designed that the maritime defense space that we can deny from threats is divided into three lines of defense: 1 line (radius 3,000km), 2 lines (2,000km), and 3 lines (1,000km). The three defense zones of the three lines were defined as an active defense(1 line), defensive

* Lieutenant Commander, Ph.D. in Military Strategy, Office of DCNO for Planning & Management.

offense(2 line), active offense(3 line). The three defense zones of the three lines were defined as the sphere of core maritime, As a power to deny the sphere of core maritime, it was analyzed as a maneuvering unit, a nuclear-powered submarine, the establishment of missile strategy, and the fortification of islands station. The marine strategy of South Korea with these concepts and means was defined as 'Offensive Maritime Denial Strategy'.

Key Words : Maritime Strategy, Sphere of Maritime, Active Defense, Defensive Offense, Active Offense, Offensive Maritime Denial Strategy

논문접수 : 2018년 11월 30일 | 논문심사 : 2018년 12월 20일 | 게재확정 : 2018년 12월 26일